

정부에 바란다

강 춘 성

경남낙협 조합장

89년 4월 정부가 미국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우선 협상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243개 품목의 농산물을 3년에 걸쳐 자유화하기로 발표한 이후 동년 10월에는 GATT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은 더이상 할 수 없도록 결정됨에 따라 90년 7월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 자유화 해야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응정책을 세워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이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제자유무역 질서내에서 존립 또는 성장여부를 판가름 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90년 7월에는 UR 농산물 협상그룹의 드류의장의 협상초안에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 중심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전됨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이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농업은 드류의장의 안 대로 된다면 말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농민뿐만 아니고 뜻있는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UR 농산물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묘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먼저 UR 농산물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전개 되는것을 반대하고, 협상타결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이 농민의 생존권과 타업종에 뒤지지 않는 소득수준의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농업이란 미국등과 같이 광활한 토지에서의 조방적 농업경영형태와 스위스등 토지가 적은 지역의 기술 자본 집약적 형태로 양분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기술,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제아래에서 협상후의 농업정책 방향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농업생산 구조 개선을 전제로한 전업농 육성과 농외소득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고 개방을 방어하는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발전적인 자세로까지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들 한다.

말은 옳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탁상위의 공론이 아닌 실천이다. 본인은 국제간에 얽혀서 추진되고 있는 UR농산물 협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방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개방화에 따른 외부의 압력보다 UR에서 우리농업을 후진국 그룹에 넣어서 보호를 받지않으면 안될 정도로 생산기반등 농업생산 여건을 취약한 상태로 방치한 국내농업 정책에 있다고 본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현시점에서 뒷바침이 되는 재정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적인 투자없이 우리나라 농업은 살아남을 수없고 농민은 갈 곳 없어 현재 서울이 안고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격적인 재정투자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개발,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투자다.

세계속에 오늘의 한국을 60년대까지는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정책개발, 기술개발등에 참여한 우수한 두뇌들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이 우수한 두뇌들을 활용할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늦지만 지금이라도 정책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극화 한다면 개방압력에 따른 우려와 고통을 도약의 계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응급처치만이 아닌 영원한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 하는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제도의 개선이다.

농업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가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진 농업국에 비견할 수 없는 높은 세금, 비싼금리, 빈약한 재정지원, 고통스러운 생산여건등이 개선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값싸고 신선하며 안전성이 높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산물 생산만이 농업과 농민 농촌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자면 값비싼 축산물을 생산 할 수 밖에 없도록 배합사료등에 외국에는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붙인 다든지 3개의 대두박 생산재벌을 위해 값비싼 대두박을 이용토록하고 식품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부가 갖고 있던 식품제조 허가마저 보사부로 넘어가 식품의 안전성만 강조되고 생산과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작목별 생산단체의 육성이다.

농업생산이나 국민권익신장을 위한 단체가 많지만 작목 하나 하나를 지켜준다는 것은 어렵다. 중요작목마다 그 작목을 지키고 발전 시켜나갈 생산자 단체가 육성될 때 그 작목은 살아 남을 수 있을것이다. 그 작목의 생산농민이 누구보다 그 작목을 잘알고, 또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작목에 속한 농민들이 모여 기술개발, 홍보, 정책개발을 하여야 한다.

넷째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다.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고려사항은 도시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결된다. 식량안보, 환경보존, 고용, 지역균형발전, 식품의 안전성등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고 농업을 살려야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갖는 외국산을 선호하는 마음을 국내 농산물 애용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며 막대한 농업투자 재원마련을 위한 재원확보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 힘이없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농업이 오늘과 같이 낙후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농민이 힘을갖고 농업을 지켜 나가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것이 농민에게 주어진 권리요 또는 의무이다. 오늘 사는 이땅의 농민이 이를 포기한다면 후손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안겨 줄 것이다. 힘없는 농민이 무슨 힘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탄 할 수만은 없다. 협동단결이라는 강한 힘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